

## 아베내각의 경제정책기조: 성장 중시와 재도전 지원

김웅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아베 신내각이 내각지지율 71%를 기록하면서 2006년 9월 26일 출범했다. 정권발족시의 지지율로서는 2001년 4월 고이즈미내각의 80%에 이어 역대 제2위의 높은 수준이다. 아베내각은 평화헌법 개정과 교육개혁 등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표방하고 있고, 강한 일본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안보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일견 아베내각이 전통적인 정치, 외교, 안보 영역을 중시하는 내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자민당 총재선출과정의 정책구상, 내각구성의 특징, 그리고 소신표명 연설 등에서 나타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노베이션과 개방에 의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이즈미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아베내각이 출범하면서 아베내각이 고이즈미내각의 구조개혁노선을 지속할 것인가, 고이즈미류의 개혁이 남긴 부의 유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시아 지역 및 국가와의 경제통상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등을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아베수상의 저서(『아름다운 나라로』)와 총재선 정책구상, 아베신내각의 경제각료 구성, 아베수상의 소신표명연설 등에서 나타난 아베내각 경제정책기조의 특징과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베수상의 경제정책구상

아베수상의 경제정책구상의 골자는 연 3% 실질성장 전략의 추진, 격차해소를 위한 '재도전 사회'의 실현, IT분야 투자 촉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 이노베이션(기술혁신)과 개방에 의한 경제성장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수상은 기술혁신에 대해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통신망을 갖추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IT분야에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등의 정책을 취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아베수상의 정책구상은 기술혁신과 함께 무역자유화와 대일 직접투자의 촉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일본이 시장개방을 통해 성장력이 높은 동아시아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하면 일본 기업은 폭넓은 해외 진출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베식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장 중시와 함께 아베수상의 경제정책구상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전 지원은 공급 중시 경제정책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패자들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과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기업의 협력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성장없이 재정재건 없다'는 슬로건 하에 세출개혁에 우선적으로 대처한다는 재정건전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 증대와 세출 삭감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 2. 아베내각의 발족과 성장중시노선

아베수상의 정책구상은 아베 신내각의 경제각료 구성과 성장중시노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노베이션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축으로 내건 신내각의 경제각료 구성은 경제계와 시장관계자로부터 '경제성장노선을 우선한 포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베수상은 성장전략의 추진역으로서 자민당의 상공족의원(商工族議員)<sup>1)</sup>을 재무상과 경제산업상의 중요포스트에 기용했다.

9월 26일 발족한 아베내각은 경제재정담당상에 민간출신의 오타 히로코씨를 기용함으로써 구조개혁노선의 계승을 선언하는 한편, 베테랑 상공족인 오미 고지 재무상과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상을 중요각료에 기용함으로써 아베내각은 경제성장전략을 정권의 중요과제로 선명하게 자리매김했다. 아베내각이 성장전략의 주축으로서 이노베이션에 의해 폭넓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여 실질 3% 정도의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투자감세 등 경제산업성측의 요망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아베내각에서는 고이즈미정권의 구조개혁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는 '제도전 지원'을 담당할 제도전담당상이 신설되었고, 금융상이 이를 겸직하게 되었다. 이는 취약해진 재정상태와 함께 고이즈미개혁의 그늘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격차문제에 대한 대처 의욕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이즈미 전수상은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활력을 고취하고 일본경제의 성장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재정적자와 사회적 격차문제를 부의 유산으로 남겼다고 평가되고 있다.

1) 족의원은 여당의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정책입안에 영향력을 가진 정치가 집단을 말한다. 당해분야를 소관하는 부처의 대신, 정부차관 등의 경험자, 소관부처의 고급관료(사무차관 심의관 등) 출신 의원 등이 많고, 이들이 정책입안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로비스트화하고 있는 족의원의 특정 부처와 업계의 권익을 둘러싼 유착체질이 문제시되고 있다.

### 3. 아베내각과 구조개혁

고이즈미정권하에서 구조개혁 추진의 사령탑 역할을 한 것이 자문회의이다. 특히 경제재정자문회의는 5년 만에 걸친 고이즈미내각에서 187회 개최되어, 수상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령탑역을 수행했다. 아베수상 또한 관저의 기능강화가 정치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수상이 결단하고 그 결단이 실행되는 관저주도형의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정책 역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비롯하여 관저를 정책결정의 주무대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아베내각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경제재정자문회의의 각료멤버는 오미 재무상과 아마리 경제산업상, 오타 경제재정상과 총무상, 그리고 일본은행총신의 시오자키 관방장관 등 5명이다. 이들 모두 재무성이 지향하는 증세노선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케나카 전 총무상 하에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이끌어온 오타 히로코씨의 경제재정상 취임은 고이즈미정권의 구조개혁노선을 계속하고 가속화한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베내각은 ‘개혁없이 성장 없다’는 고이즈미 전수상의 논법을 계승하여 ‘성장없이 재정재건 없다’는 경제정책의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성장전략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그 과실로서 세의 자연증수가 발생하여 비로소 재정재건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세의 자연증수만으로 재정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철저한 세출삭감과 정부자산 매각 등으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미 고지재무상은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재정재건에 확실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도 이후의 국채신규발행액에 대해서도 2006년도 수준인 30조엔보다 낮추는 방향에서 세출삭감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세출삭감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연간 1조엔의 베이스로 증가하는 사회보장비를 어떻게 억제하는가이다. 재정재건을 호소해온 야나기사와 하쿠오씨의 후생노동상 기용도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보장분야에서 세출삭감을 가속화한다는 아베수상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야나기사와 후생노동상은 사회보장재원으로 서의 소비세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오미 고지 재무상은 정책감세 등 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는 방향에서 재정재건하는 방식도 있다는 입장이다. 오미 고지 재무상이 자민당 세제조사회 회장으로서는 매년말 세제개정논의에서 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2006년도 세제개정에서 수천억엔 규모의 법인세 감세를 단행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

#### 4. 아베수상의 소신표명 연설: 성장과 재도전

아베수상은 9월 29일의 증참양원 첫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중점전략으로서 기술혁신을 발판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 등에 대한 정책감세를 표명했고,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촉진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다만 재정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은 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고이즈미정권의 관저주도형 구조개혁전략을 계승하는 한편, 도산과 실업으로부터의 재기를 촉진하는 '재도전지원책'의 추진 등 구조개혁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내각의 경제정책은 일본이 21세기에 아름다운 나라로서 번영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국면에서도 이노베이션의 힘과 개방적 자세에 의해 일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약, 공학, 정보기술 등의 분야별로 2025년까지를 시야에 둔 장기 전략지침인 '이노베이션 25'를 책정하고, 이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기술혁신담당상 하에 2006년 10월에 검토팀을 설치하여 2007년 2월경에 대상분야를 선정하고, 경제재정자문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2007년 6월을 목표로 각의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7'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재택근무 인구의 배증 등 세계 최고수준의 고속인터넷기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시책을 제시했다.

나아가 개방에 대해서는 아시아 등 해외의 성장과 활력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호적으로 나라를 개방하는 EPA(경제연대협정)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동시에 WTO DDA 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2010년까지 GDP대비로 배증시키는 계획의 조기달성을 지향하고, 애니메이션과 음악 등의 콘텐츠, 식문화와 전통문화 등에 대해 국제경쟁력과 세계로의 정보발신력을 강화하는 '일본문화산업전략'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신표명연설에는 향후 5년 이내에 주요한 국제회의의 개최건수를 5할 이상 늘려 아시아 최대 개최국이 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국제공항 등의 기능강화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사람, 재화, 돈, 문화,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가교가 되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신표명연설에서는 또한 아베내각의 중요과제로 종합적인 '재도전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을 발

표했다.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누구든지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새로운 일본이 지향해야 할 것은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승자와 패자가 고정화되지 않는 사회, 일하는 법, 학습하는 법, 생활하는 법이 다양하고 복선화(複線化)되어 있는 사회, 다시 말해 기회가 넘치고 누구든지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는 소득격차 자체의 해소보다는 재도전 지원을 통한 격차의 고착화 방지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신졸일괄채용시스템의 재검토, 비정규직(파트타임 등)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또한 재도전 직장체험제도의 창설과 단괴(團塊)세대<sup>2)</sup> 등 베테랑 인재의 재고용 촉진 등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한 장벽을 낮추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프리터<sup>3)</sup>를 피크시의 8할로 줄이는 등 여성과 고령자의 적극적인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재도전하는 기업가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개인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용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재도전을 지원하는 민간과 지자체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수상에 의한 표창제도를 새롭게 신설할 계획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내각의 경제정책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을 우선시하는 공급중시노선을 택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이노베이션과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베내각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고이즈미정권의 경제정책기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경제성장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금의 일본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정부가 성장산업을 발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분배와 산업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의를 요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아베내각이 기술혁신을 총괄할 이노베이션 담당상을 신설할 정도로 기술혁신을 통한 강한 일본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술혁신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수상이 IT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IT를 활용

2) 일본에서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의 3년 동안에 태어난 전후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후생노동성의 집계에 따르면 약 800만명에 이른다. 세대의 규모, 세대의 특성,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 구조개혁과의 관련성 등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년퇴직문제과 새로운 실버층으로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3) Free Arbeiter라는 합성어의 약자로서 정규직에 속하지 않고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을 지칭한다.

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베내각과 경제계가 고이즈미내각의 '아시아외교의 실종'이라는 부의 유산을 해결하고 일본의 성장동력이 될 아시아국가와의 연대 및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FTA협상의 재개 및 타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개정과 애국심 교육 등의 이슈가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함께 아베내각 경제정책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는 재도전 지원문제는 아베내각의 트레이드마크라기보다는 그 기원을 따져보면 문제의 발생뿐만 아니라 해결책의 모색도 고이즈미정권에서 출발한 것이다. 고이즈미정권에서는 내각의 정책회의로서 2006년 3월 재도전추진회의('다양한 기회가 있는 사회' 추진회의)를 설치하여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내각의 중요정책과제로서 추진한 바 있고, 2006년 5월에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재도전문제는 고이즈미정권에서 싹을 틔우고 아베내각에서 줄기로 성장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노베이션과 개방을 통한 성장과 마찬가지로 고이즈미정권의 경제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없이 성장 없다'는 경제정책노선의 골격을 이어가면서 부의 유산에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정부개입을 강화시킨 것이 아베내각의 경제정책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개입에 의한 재도전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나눠 먹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아베수상이 재도전 지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와 개인보증에 편중되지 않는 융자 등을 요청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고려하는 금융행정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국면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공급중시 경제정책 노선에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 건전화의 기조 하에 정부 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정책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고 성장 중시 전략은 추가 금리인상과 같은 금융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장률 인상을 위해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완화 요청이 높아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의 시기를 주시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미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베내각이 당면한 현안은 일본정부의 악화된 재정상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명확한 전략과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베내각이 향후 5년간의 세출 개혁 초년도인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 철저한 세출삭감과 개혁의 지속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아베수상의 경제정책구상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며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애매모호함은 총재선출과정에서 정책과 이념을 달리 하는 의원을 아베지지파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베내각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경과에 따라서는 소비세 증세 등 가려져 있던 정책의 대립이 표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성장과 세출삭감에 대한 대응만으로 소비세 인상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베수상은 9월 26일의 취임기자회견에서 구조개혁노선의 대폭적 수정이 아니라 가속화의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는 적어도 2007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까지는 소비세 논의를 봉합해 두겠다는 아베수상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소비세가 쟁점이 되었던 1989년과 1998년의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고, 당시 수상이 되진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출발한 아베내각이지만 참의원선거를 그르치게 되면 단명정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주도하게 될 민간출신의 오타 경제재정담당상의 여당내에서의 발언력이 제한되어있는 만큼 자민당 지도부를 상대로 어디까지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내각의 구조개혁노선의 일차적 목표가 2007년 여름의 참의원선거 대책에 맞춰지고, 아베수상이 고이즈미 전수상 이상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구조개혁이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